

# 野, 금투세 연기 자중지란… ‘유예’ vs ‘무조건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민주당, 비공개 회의서 의견 수렴  
이재명 ‘우려’에 도입시기 재검토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강행’ 입장

“정무위·기재위 등 의견 수렴해  
당 입장 확고하게 정리할 것”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당 차원에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한 본격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행 기류 vs 신중론, 野 당내 진통 전망**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입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시행 시점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금투세 관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신중론 발

언 이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예상 가능한 영향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계획대로 2023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무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당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투세, 동학개미가 반대하는 이유는?**

특히 동학개미들의 조세 저항에 따른 여론 악화가 민주당 내에서의 신중론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다.

한편, 실제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낼 가능성은 낮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5000만 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7281명)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 2020년에도 과세 대상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세부담에 국내 증시를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금투세를 도입했다. 대만의 경우 1973년, 1989년, 2013년 모두 세차례에 걸쳐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였다. 시행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해 결국 정책을 철회한 사례도 있다. 특히 1989년에는 9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새 지취엔지수가 3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단,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시기가 여야 쟁점으로 떠올라 당분간 그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금투세는) 5000만 원 초과분에만 세금을 내고, 5년이나 이월공제를 해줘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가 아니다.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기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나 의견수렴이 부족해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1면 ‘이재용, 글로벌 거물’서 계속

## 다주택자 4.7만명 줄고 1주택자 44만명 늘었다

통계청, 2021년 주택소유통계  
종부세 등 피해 주택 정리가구 늘어  
주택소유자 자산 양극화 더 심해져

지난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4만7000명 가량 줄어든 반면 1주택자는 44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가구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 보유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됐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 가액은 평균 14억8000만 원으로 1년 새 1억7500만 원 오른 반면 하위 10% 가구 주택 가액은 평균 3000만 원으로 200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

15일 통계청의 ‘2021년 주택소유통



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주택 수는 1881만2000호로 1년 전보다 28만6000호(1.5%) 증가했다. 이 중 개

인 소유 주택 수는 1624만2000호였고,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전년 보다 39만3000명(2.7%) 늘었다.

여기서 다주택자 수가 227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만7000명(-2.0%)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2주택자는 180만4000명으로 -1.4%, 3주택자 28만3000명(-4.7%), 4주택자 7만2000명(-5.3%), 5건 이상은 11만4000명(-2.6%)으로 모두 줄었다.

하지만, 1주택자는 1281만6000명으로 43만9000명(3.6%) 늘었다.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정리한 가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주택 보유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20.2%)가 가장 커졌고, 이어 세종(18.5%)과 충남(18.0%) 순이었다.

서울(14.3%)과 경기(14.4%), 인천

(13.6%)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던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외지인이 타 지역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세종이 32.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7.6%)과 인천(16.9%), 서울(15.9%)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 양극화는 더 커졌다. 상위 10%의 주택 평균 자산 가액은 14억84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7500만 원 올랐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집값은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하위 10%의 49.5배에 달했다. 상위 10% 와 하위 10%의 주택 가격 격차는 2019년 40.85배, 2020년 46.75배에 이어 더 벌어지고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생산량이 극히 적은 탓에 주문을 해도 받기 어려운 현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EUV 장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 지위가 결정된다 보기도 한다. 특히 EUV 장비도 한계를 보이면서 성능을 개선한 하이NA EUV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ASML과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ASML도 뉴캠퍼스를 통해 국내 중소업체 아웃소싱 비율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 삼성전자 협력사들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방한 사우디 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차담회를 갖는다고 전해진다. 빙 살만 왕세자는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를 주도하고 있다. 2019년에도 방한해 이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만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네옴시티 사업 협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미 현대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2조 원 규모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한 상황, 네옴시티가 초고속 통신과 IoT 등 첨단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라 세계 최고 수준 삼성전자 기술력이 절실히 평가된다.

재계 총수들도 동참해 시너지를 노린다. 이날 회동에는 이 회장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합석한다.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와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웅 기자 juk@

## 자회사 출자 범위 ‘네거티브 방식’ 전환 논의

» 1면 ‘금융산업 족쇄 금산분리’서 계속

금융위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경우 위험총량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을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포지티브, 자회사 출자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방안은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맞춤형 규제를 할 수 있으나, 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업 수행 시 리스크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업무 위탁 범위 확대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위탁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업무 위탁 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 타 업권은 업무위탁시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상위법을 마련하거나 규정을 통

해 업권별 위탁 가능여부를 통일하겠다는 설명이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본질적 업무는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한 업무를 말한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대출심사·결정과 대출금 지급은 본질적 업무지만, 대출모집과 제출 서류접수는 비 본질적 업무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대출시 부동산담보 가치를 분석하는 핀테크 기업에 위탁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본질적 업무에 해당해 위탁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비핵심업무만 위탁하거나,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 금융회사가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기업의 장애 발생 시 서비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자체 사전점검과 사후관리책임도 명확히 한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금산분리 제도와 업무위탁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업권,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금융 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